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 넘어 다양한 관점을

권장원 /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인 부동산. 우리 언론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적 이슈를 해석하는 상황은 부동산 보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언론의 부동산 보도 쟁점과 해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동산 정책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 중 하나다. 세계 28위의 인구(2021년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규모를 기반으로 세계 12위의 GDP(국내총생산)와 27위의 1인당 GDP, 세계 11위의 국민총소득과 24위의 1인당 국민총소득(2019년 한국은행, 세계은행, 대만통계청 기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국토 면적은 전 세계 107위(2017년 국토교통부, FAO 기준)로 매우 협소하며,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이상이 집중해 있어 한국에서의 부동산 의제는 첨예한 국민적 관심사인 동시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가장 역점을 두는 핵심적 정책 사안일 수밖에 없다. 언론사로서도 핵심적인 화두이자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

지만 몇 번의 정치적 변화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상호 소통과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보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부동산 의제 속에는 ‘주거 복지’라는 공적 가치와 ‘재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사적 가치가 병존해 보도의 지향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공히 ‘부동산 시장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가치와 진단, 그리고 해법 차이에 따른 소통과 합의 도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언론 보도 태도 역시 현재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 정책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큰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민감한 반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언론 보도 역시 다른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뉴스1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는 언론사 간 불필요한 보도 경쟁으로 인해 부동산 이슈가 과열 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지향점이 왜곡·변질돼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언론이 야기한 혼란과 갈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부동산 보도 역시 타 보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전달과 함께 독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외국에 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자주 나와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환경이 형성된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언론사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그에 따른 세부 실행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역시 여론의 방향을 형성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 그 이면에 내재한 보도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권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일컬어지는 정권의 이념적 가치 지향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해법 차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보수 정권의 경우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으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건축 확대와 수도권과 민간 개발 중심

의 부동산 정책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반면 진보 정권에서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문제로 규정,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수정·김은이, 2014). 비록 집값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집권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해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태도 분석에 있어 정치·경제적 요인, 게이트키픽 과정에 따른 조직 특성, 광고주를 비롯한 수익 구조, 출입처에 대한 의존도 및 기자 개인의 가치 지향 등 다양한 통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부동산 보도에 있어 정치 이념적 가치가 언론사 보도 태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별 언론사의 보도 태도를 분석해보면, 중립적 보도가 과반을 넘어 통계적 차원에서 언론사 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정권 별 언론사의 위기 진단에 있어 부동산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춰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김수정·김은이, 2014),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되는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에서의 차이가 존재(김성용·오세준, 2016)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별 언론사의 보도 태도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기보다는 정권의 이념적 가치 지향과 연동한 취재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언론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도할 때 해당 언론사의 수익 구조 또한 적지 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사

실이다. 특히 건설 업계 관련 행사의 수익 비중이 높거나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지들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출입처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구독 수익의 비중이 높은 보수 및 진보 중심의 언론사와 달리 경제지들은 조직 내부의 게이트키픽 과정에서 데스크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정지성, 2019), 부동산 분야에서 출입처와의 이해관계가 매우 긴밀해 주요 광고주인 건설 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가 양산될 가능성과 함께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 등과 같이 광고성 보도를 일반 기사처럼 작성하는 보도 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증론이다.

보도 태도를 분석할 때 정보원 선택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위기 진단과 보도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정보원은 취재 보도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해 보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이슈는 개인적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평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로 대표되는 정보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개별 언론사가 취재 보도 과정에서 특정 정보원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정보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언론사의 정치·경제적 의도와 이념적 가치 추구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도 과정에서 인용되는 정보원에 대한 분석은 언론사 보도 태도에서의 정치·경제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보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문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행정부와 부동산 업계, 교수, 금융 업계 등의 종사자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주요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채영길·장시연, 2018), 보수, 진

보, 경제 매체 모두 각자의 성향과 기조에 맞는 취재원과 제한적으로 접촉하는 성향이 있으며, 진보지 역시 주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조사(정지성, 2019), 방송사에 출연한 정보원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40% 정도가 강남 3구 지역 소재 중개업자이고, 교수 및 전문가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학 교수 등의 전문가 7인이 부동산 정책 논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경제나 정책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관점보다 금융 투자 전문가 목소리에 입각한 개인적 투자 관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논점(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사의 정치·이념적 가치가 정보원의 선택과 활용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경제지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교수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해 부동산에 대한 공공재적 관점보다는 소수의 대주택자에게 유용성이 높은 시세 중심의 투자적 관점에 입각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취재, 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부동산 공급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이 보도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언론인 개인 차원에서의 통제 요인이다. 실제 행위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 대한 접근은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문제 제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각 언론사 논설위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조직 내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설에 보수적 성향이 투영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진보, 경제지 모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띠는 이유와 관련해, 취재 보

도한 기자들의 연령대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 입각해 정책의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실효성 유무와 애초 추구한 서민층에 불리한 정책의 모순에 대한 기자 개인적 관점에서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정지성, 2019) 역시 언론사 보도 태도에 기자 개인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논점이라 하겠다.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해법 찾기의 출발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정리·분배해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당위론적 가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과 영리 추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서 언론사가 직면한 현실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정치·경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론을 필요로 하는 권력과의 연계 없이는 다양한 정보 확보는 물론 언론사 운영 및 영리 추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구조이자 시스템의 문제이며, 언론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원인이자, 비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재 보도 관행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사 보도 태도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언론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볼 때,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가 언론 보도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원을 활용할 때 보수와 진보에 입각한 이념적 가치를 넘어 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보원 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언론사의 신뢰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실행 요인임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언론 보도의 노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확인 보도, 자극적 표현을 포함한 왜곡 및과장 보도 등의 문제가 부각된 바 있으며, 객관적이고 심층성을 지닌 고품질의 저널리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로 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널리즘 독립성’에 대한 항목이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뉴스 이용자의 정파적 뉴스 이용이 언론의 신뢰 하락 요인임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차원에서 언론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공유는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언론을 통한 국민의 정치, 경제적 참여 열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사로서는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면서 깊이 있는 정보는 물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내적 노력을 통해 고품질의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클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라는 공적 가치와 투자 및 재산권 차원에서의 사적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더욱 민감한 반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부동산 이슈에 한해서라도 정치·경제 권력 중심의 가치와 기본 인식을 토대로 언론사의 가치 지향에 입각한 정보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을 넘어 일반 시민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 중심의 정보 프레임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재 보도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도 관행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보수와 진보, 여야 등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 상황이 아닌 정책에 대한 정부 감시와 비판적 논점을 포함해, 다양한 관점의 관련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내재한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상호 균형된 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다. 현재로서는 비단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취재 보도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도 병행하기 위한 언론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언론인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과 그에 입각한 인식 공유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판철을 전제한 설득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언론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수정·김은이, <경제보도의 미디어 프레임과 정부의 경제 정책: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보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1), 425-454쪽, 2014.
- 김성용·오세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221-230쪽, 2016.
- 민주언론시민연합, <부동산정책 보도 등장인물, 정부 제외하면 중개업자 1위>, 방송사 부동산정책 보도 모니터 보고서 ①, 2020. 8. 19.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문가 7명 부동산정책 보도 드리식. '그 때 그 사람들' 여전>, 민주언론시민연합방송사 부동산정책 보도 모니터 보고서 ②, 2020. 8. 19.
- 정지성, <국내 언론의 부동산 정책 보도 양상 차이점과 원인 분석-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7-126쪽, 2019.
- 채영길·장시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요 언론보도 경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446-457쪽, 2018.